



1월 22일(화) 11:30(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 평가결과는 국무회의 종료시까지 부처 포함하여 모두에게 비공개입니다.
엠바고 준수를 꼭 부탁드립니다.**

총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	과장 정병규, 서기관 김진한, 사무관 이상준 (044-200-2468, 2469, 2476)
국정과제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과	과장 이승규, 사무관 안수용 (044-200-2474, 2475)
규제혁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김달원, 사무관 신용현 (044-200-2396, 2452)
정부혁신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과장 배일권, 사무관 이성락 (02-2100-3420, 3421)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문화체육관광부 소통협력과	과장 강동진, 서기관 전국은 (044-203-2951, 2955)
지시이행	국무조정실 평가관리과	과장 이승민, 사무관 하시원 (044-200-2489, 2495)

43개 중앙행정기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급]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 기관명은 직제순)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1.22(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적을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 * 일자리·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0 + 소통만족도5
 - ** 가감점 : 지시이행(±3)
-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으며,
-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8) 했습니다.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습니다.

□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또한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등을 통해 보육·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하도급·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했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데이터·AI·수소경제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으로 지역 성장기반을 강화했고, 농어업 취업자 증가(6.2만명) 및 쌀값 회복·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 진상규명·국가헌신에 대한 보답 등을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했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생활적폐 등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 반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② 규제혁신 부문

- ‘선허용·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 테마별 일괄정비(Top-down)와 현장애로 개선(Bottom-up)을 통해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고, 사회적 과급효과가 큰 ‘Big Issue’도 일부 해결**됐습니다.
 - * 신산업 현장애로, 창업규제, 영업·입지규제, 행정조사 정비,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등
 - ** 입국장면세점, 인터넷전문은행, 데이터규제, 의료기기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으며,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 * 감사원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배포 등
 -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방문, 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시도별 규제혁신 간담회 등
-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해충돌·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③ 정부혁신 부문

-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 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 * '19년 예산 기준 38개 사업 928억원('18년 422억 대비 2배↑) / ** ('17)22회 → ('18)52회
- 공직의 여성 대표성 강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사회적 약자 배려·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운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도가 상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 OECD 정부신뢰도 : (17) 32위 → ('18) 25위
- 다만,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은 다소 미흡했으며, 모바일·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행동방식 변화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④ 정책소통 부문

- 남북관계 개선·생활체감형 정책 등에 대해 소통 메시지 조율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및 정책 발표 사전협의 확대('17년 199건 → '18년 256건, 28% 증가) 등

- 국민의 디지털 중심 정보소비 패턴에 부응하여 전담조직 확충* 등 디지털 소통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13개 부처 디지털 소통조직 신설(8개 부처 공식 직제화 완료)

-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이 미흡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⑤ 소통만족도 부문

- 복지·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았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기상청) 등

- 방위사업·조달 등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내 기관명은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미흡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 남북관계·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붙임 :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1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 평가부문 · 방법

- (평가부문) 일자리 ·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지시이행(가감점) 등 6개 부문
- (평가방법)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을 위해 부문별 주관기관의 정량평가와 민간 평가지원단의 정성평가 병행
 - 부문별 주관기관은 추진계획 대비 이행정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정량평가
 - 부문별 평가지원단은 민간전문가 ·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 정책효과를 정성평가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주관기관	평가지원단
일자리 · 국정과제	65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 62개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등	국조실	459명
규제혁신	10	규제혁신 성과 · 체감도 등	국조실	26명
정부혁신	10	참여 · 협력, 정부 신뢰 제고 실적 등	행안부	20명
정책소통	10	부처별 대국민 소통 활동 실적 · 노력 등	문체부	35명
소통만족도	5	부처별 소통 노력에 대한 국민체감도	문체부	
지시이행	±3	대통령 지시사항(160개) 이행 실적	국조실	459명

□ 평가결과 산출

- 기관종합 · 부문별 평가결과를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등급 산출(우수 30%, 보통 50%, 미흡 20%)

□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 주요성과 】

○ 전쟁위협 해소 및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기반 마련

- 남북정상간 핫라인 연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시 소통체계 구축
- 판문점선언 이행 9.19 군사분야 합의,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DMZ 지뢰제거·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 유해발굴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
-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참가 등 경제·사회분야 협력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 북미 협상 중재를 통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 포용적 복지 확대 및 보육·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아동수당 지급, 어르신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 상복부초음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생애단계별·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초등돌봄 확대 등 보육·교육 부담 경감

○ 일자리·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본격 추진

- 현장민생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안정자금·근로장려금 지원으로 근로소득 증대
- 정규직 전환·상용근로자 증가 등 일자리 질 제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균형 도모
- 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AI·수소경제 투자 확대, 역대 최대 벤처투자 등을 통한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
-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카드수수료 인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경감 및 보호
- 수출 6천억달러·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경제강국 3050 클럽(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에 세계 7번째 진입

○ 지역의 균형발전 기반마련과 농어촌 경제의 활력회복

- 지역산업 위기지역 지원, 도시재생 뉴딜·생활SOC 등 지역 성장기반 강화
-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제2국무회의’), 국가기능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추진
- 농어업 취업자 6.2만명 증가, 쌀값 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 미래지향적 사회통합기반 마련 및 적폐 청산

- 과거사 진상규명,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답을 통한 국민통합 증진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투명한 사회 추진

【 보완필요 】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애로에 대한 대응 다소 미흡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 미흡 및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미흡
-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적극 해소 필요
-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정리, 자치분권 실현 등 주요 개혁입법 지연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보통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복청, 새만금청
미흡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식약처, 원안위, 통계청, 기상청

□ 규제혁신 부문

【 주요성과 】

- ‘先허용·後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규제혁신 입법을 통해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허용해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18.1·10),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18.1·11), 혁신성장 선도사업('18.1),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발표('18.11) 등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입법 완료
-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 창업·영업활동 등 기업활동 저해 규제 혁신, 일자리 창출 유도

- 영업·입지규제('18.4), 창업규제('18.10), 시장진입규제('18.10) 등
- 동일한 규제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제도 도입·시행(「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18.10))

-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 관련 불편·불만사항 접수·해소

-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Big Issue' 해결 (의료기기('18.7), 인터넷전문은행('18.8), 데이터규제('18.8) 등) /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지역간담회 등 추진
- (규제개혁신문고) 인터넷으로 국민건의를 접수, 201건 개선 /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합동조직으로 153건 개선
- 민생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테마별로 혁신, 체감도 제고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18.5), 시험·검사기관규제('18.6), 지자체건의해소('18.12) 등)

- 공무원의 의식·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유도조치 마련·시행

- 적극행정 면책, 신산업 분야 감사 자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 보완필요 】

-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
- 정책가치·이해충돌이 있는 규제 분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대타협 노력 및 규제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설명 등 소통 노력 필요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관세청, 산림청
보통	기재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특허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미흡	교육부, 공정위, 금융위	조달청, 소방청

□ 정부혁신 부문

【 주요성과 】

- 기관 핵심정책에 안전·인권 등 사회적 가치 반영을 확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추진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로 해외국민의 사건·사고 신속대응 등
- 공직 내 여성 진출 확대(고공단·과장급 : ('17) 6.1%·14% → ('18) 6.8%·16.9%), 사회적 가치 관련 예산 대폭 확대(('18)56.8조원→('19)65.8조원, 9조원 증가)

- 행정내부 분야까지 국민의 참여 확대, 기관간 협업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전 부처 시행, 국민참여 예산제 본격 시행(38건, 928억원 반영),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활성화('18년 52건)
- (국세청-법원행정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토록 개선 (병무청-국방부)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즉시 발급

- 공직사회 내 부패·성폭력 등의 개선 노력,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 제고

- 종합청렴도 상승 : ('17) 7.70 → ('18) 8.17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신고접수 1,313건, 징계 등 조치 360건)
- 모바일을 통해 여권 유효기간, 영유아 예방접종일 사전 알림 서비스 등 제공

【 보완필요 】

-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
- 모바일·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행동방식 변화에 상응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필요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권익위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보통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미흡	통일부, 문체부, 산업부, 공정위	방사청, 소방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정책소통 부문

【 주요성과 】

○ 핵심 국정아젠다에 대한 범부처 협력 소통 활성화

- △일자리 △포용국가 △남북관계 △혁신성장 등 핵심 국정아젠다 관련, 주기적·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통 메시지 조율 등 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

-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및 정책발표 사전협의('17)199건 → ('18)256건, 전년대비 28% 증가) 확대 등
- 국정과제 인지도, 한국리서치('18.12.5 ~ 12.12) : 남북정상회담(92.6%),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시간 단축(90.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80.4%) 등

○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쌍방향 소통 확대

- 13개 부처 디지털소통조직 신설(8개 부처 공식 직제화 완료)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 활성화

- 각 부처 대표채널 활동실적(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증가('18.3) 7천8백만건 → ('18.11) 1억2천만건으로 56.3% 증가)
-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채널 공식 공개(전부처 대상, 12.20~)

【 보완필요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미흡

○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 부족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병무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미흡	교육부, 중기부, 보훈처, 권익위	국세청, 행복청, 해경청, 원안위

□ 소통만족도 부문

- 복지·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고, 방위사업·조달 등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는 만족도가 낮은 수준

- [높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기상청) 등
- [낮음] 첨단무기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방사청), 나라장터 벤처나라(조달청)

- 여성은 문화, 남성은 안전 분야의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50~60대는 행정서비스·환경 분야, 20대는 노동 분야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

- [여성]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확대(문화재청)
- [남성] 소방차 길 터주기(소방청)
- [중장년] 행정서비스 혁신(정부24·문서24)(행안부), 전기차 보급 확대(환경부)
- [청년] 일·생활의 균형 실현(고용부)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해경청
보통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행복청
미흡	통일부,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조달청, 방사청, 새만금청, 원안위

□ 기타 (지시이행)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법제처,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새만금청, 해경청
보통	기재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	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행복청, 원안위
미흡	국방부, 환경부, 고용부, 권익위	통계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3 기관종합 평가결과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기타(지시 이행) 부문 점수 합산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보통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미흡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통계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4 평가결과 후속조치

- 부문별 개선필요사항 부처에 통보 (즉시)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 포상 (~4월)